

제1장 국민이해 증진 활동

제1절 사회환경의 변화

1. 국제환경의 변화

1973년의 제 1차 석유파동 당시 전 세계에서 가동중인 원전은 147기로, 세계 에너지 소비의 0.8% 정도만을 원자력발전이 담당하였다. 그 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각국은 에너지의 안정 공급을 위해 탈 석유정책의 일환으로 원전개발을 활발히 추진해오던 중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원전축소정책으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원전건설을 억제해 왔다. 그러나 프랑스와 일본, 한국 같은 자원빈국인 나라와 중국 등 일부 개도국들은 원전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02년 말 현재 전 세계 31개국에서 436여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고 세계 총 발전량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그 동안 원전건설을 억제해온 선진국들은 부존자원이 풍부하거나 전력수요 증가가 거의 없이 포화상태로 대규모 용량인 원전의 추가건설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 일부 유럽연합국에서는 원전 폐쇄정책하에 대안으로 대체에너지개발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선진국들도 일부 원전 재추진 정책으로 선회하거나 원전폐쇄정책을 유보하는 추세이다. 최대 원전 운영국인 미국은 원전 재추진 정책('01. 5)으로 선회했으며 일본도 2010년까지 13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유럽연합 국가들도 단계적 폐쇄정책에서 현재 유보상태이거나 원자력의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대체에너지가 단기간 내 확보될 수 없고 또 온실

가스 배출 감축문제로 원자력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미 에너지정보국(EIA)의 보고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은 계속 중요한 전원이 될 것으로 보면서도 원자력발전 점유율이 2025년에는 12%로 감소할 것으로 보는데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자력발전을 피하려는 현 추세가 계속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세계 에너지 동향은 대체에너지 개발에 치중하는 반면에 원전의 재추진 또는 폐쇄정책을 재검토하는 경향이다. 앞으로도 대체에너지의 실용화 때까지는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원자력만이 유일한 대안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급속한 산업화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신규원전을 계속 건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국내환경의 변화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는 지난 1970년대 석유과동 이후 탈유전 원 및 전원의 다원화 정책에 따라 원자력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1978년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25년이 지난 현재 가동 원전기수는 18기로 늘었고 설비 용량은 1,571만 6천kW로서 국내 총발전량의 40%이상을 차지하며 세계 6위의 원자력발전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아울러 원전기술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여 해외수출 수준까지 되었고 운영기술은 세계수준으로 2002년 한 해 동안 국내원전의 설비 이용율은 평균 92.7%를 기록함으로써 세계 평균에 비해 월등히 앞선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원전의 지대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인식은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어 원전의 지속적인 추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현재 원전에 대한 국민들 인식은 원전의 필요성, 환경 친화성, 경제발전의 기여도 등에서는 일관되게 긍정적이나 안정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때 국민합의는 무엇보다도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시킬 대책에 달려있다 하겠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자력은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이 우수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화를 통한 환경측면에서도 우수하므로 안전성확보와 국민신뢰도 제고를 바탕으로 2015년까지 10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여 설비용량기준, 원전비중을 34%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력수요는 경제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지금보다 1.5배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 원전확대정책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추진하는데 국내여건은 여의치 않다. 우선적으로 원자력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역 이기주의(NIMBY)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분위기였다가 기존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가세화 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원전사업의 시급한 현안 문제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확보이다. 후보지(4곳)가 발표된 상태에서 양성자가속기시설 부지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지역에 유치하려는 분위기와 지역반대운동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원전사업의 추진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원전사업과 방폐물 사업은 지역과의 합의 아래 투명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로써 원전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지며 국민합의 기반이 점점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제2절 국민이해 증진 활동

1. 원전에 대한 국민이해

우리나라는 현재 가동중 원전이 18기(설비용량 1,571만 kW)로 설비용량기준 세계 6위의 원전대국이다. 국내 에너지여건에서 원자력발전은 주력발전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 원전에 대한 국민이해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정당한 평가대신에 대체로 부정적인 면에 치우쳐 있어 원전사업 추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에서 원자력홍보는 한국수력원자력(주)과 한국원자력문화재단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 각각 그 역할을 달리하고 있다.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주)은 사업자 입장에서 원전운영의 투명한 공개와 사업의 당위성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고 원자력문화재단은 민간전문기관으로서 원전에 대한 국민합의 도출을 위해 홍보를 하고 있다.

우리의 에너지현실에서 원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너지로서 국민합의(PA)가 우선되어야 하나 국민대다수는 원전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전의 필요성, 환경친화성, 경제성과 경제발전의 기여도 등에서 일관되게 긍정적인 인식이나 반면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안전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원전PA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따라서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운영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 원전과 안전의 실상을 국민들이 수용하도록 국민홍보를 강화

하여야 한다.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혹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원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수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언론이다. 언론은 여론을 주도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가끔 발생하는 사소한 원전고장에 대해 언론의 왜곡, 과장보도로 인하여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원전신뢰도는 떨어진다. 2~3년 주기로 발생하는 월성 중수누설사건이나 방사선피폭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원전의 실상을 외면한 채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건수 위주의 안전지적사항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가끔 있다. 언론은 앞으로 원전이 핵심적인 국가에너지라는 측면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견지하고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조성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원전사업은 안전성 보장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이제 국민들도 원전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자인 한수원(주)과 정부를 믿고 원전에 대한 신뢰를 보내주어야 한다.

언론은 국가사업인 원전을 이해하고 정론을 펼쳐 원전PA에 견인차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한편 국민홍보를 직접 맡고 있는 원자력문화재단과 사업자 측에서도 원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홍보하여 국민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

현재 원전사업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와 자원문제, 대체에너지개발의 한계로 인하여 원전은 현실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다. 이점을 감안한다면 원전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2. 기관별 활동

가. 한국수력원자력(주)

2002년도 한수원(주)의 국민이해 활동은 현안인 방사성폐기물 사업 관련 홍보와 다른 원전관련 뉴스로 한수원의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는 한해였다. 상반기(2~3월)에는 발전노조파업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한수원(주)노조도 연대파업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여 전력대란까지 우려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찬반투표 중단으로 동참 파업은 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한수원(주)의 위상과 원자력 발전의 중요도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방사성폐기물사업을 홍보하는 가운데 울진원전 증기발생기 튜브 누설, 원전추가건설 불필요, 변압기화재, 울진원전 냉각재누설, 영광 5호기 무허가 가동 등 부정적인 뉴스가 언론에 비추어지기도 했다. 하반기에는 방사성폐기물 사업에 대한 국민이해 확산에 집중하였다.

(1) 원전공개정책

원전은 안전성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운영을 하고 있지만 원자력보다는 핵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그 실상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원전은 핵과 방사선이라는 공포 때문에 근원적으로 절대 안전을 보장하기가 극히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원전공개정책은 국가차원의 안전규제를 하고 있는 정부(과학기술부)에서 원전 사고·고장정보 공개지침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다. 원전에서 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정부는 물론 사업자인 한수원(주)는 그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언론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있다.

원전 사고·고장정보의 공개는 그 대상에 따라 신속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언론공개와 인터넷공개를 병행하고, 그 외의

공개대상 정보는 인터넷에만 공개하고 있다. 언론공개는 사고·고장정보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언론에 공개한 후 인터넷에 공개하고, 인터넷공개는 해당기관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각 기관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원전사고·고장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 관 명	홈페이지	게 재 코 너
과학기술부	www.most.go.kr	정보자료실→원자력소식→원자력사고·고장 정보내역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www.kins.re.kr	원전사고/고장정보
한수원(주)	www.khnp.co.kr	원전운영현황/원전사건정보

특히 2002년에는 세계 최고수준의 운영실적을 보여 고장에 의한 발전정지가 단지 총 8건(호기당 0.4건)에 불과했으며 고장내용을 언론과 인터넷에 즉각 공개함으로써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원전운영에 대한 공개는 공개지침에 따라 우선적으로 언론에 신속하게 공개하고 있으나 그 외에 발간물을 통하거나 시설에 대한 공개도 하고 있다. 또한 원전운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운전현황, 방사선관리 등 원전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실시간으로 알림으로써 원전운영정보가 공유화되어 있으며 특히 인터넷 한수원 홈페이지(www.khnp.co.kr)의 원전운영현황에 관련정보가 자세하게 공개되고 있다.

발간물을 통한 공개는 원전운영공개지인 「이달의 원자력발전」을 매달 3만부씩 발간하여 각계각층의 일반국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원전본부별로는 소식지를 발간, 주기적으로 지역주민과 관련기관에 배부하고 있다. 또한 한수원(주)가 정부와 공동으로 매년 국내 원전정책, 운영현황, 방사성폐기물관리, 국내외동향 등 원자력발전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한 「원자력발전 백서」를 5천부



〈그림 7-1〉 원자력 시찰 활동

발간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원전에 대한 국민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시설공개는 원전의 실상을 직접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원전별로 홍보전시관을 갖추고 연중 방문객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원전시설도 공개하고 있다. 일부 원전의 경우 발전소 내부 시설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므로써 원전의 안전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국내외 원자력시설에 대한 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도 언론사 기자단을 비롯하여 학계, 언론계, 정당, 지역인사 및 주민들에게 원전시찰을 실시함으로써 원전안전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해소하였다.

(2) 차세대교육

차세대에게 원자력을 바르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은 원전사업

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한수원(주)에서는 미래의 주역이자 차세대인 초·중·고교생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 및 교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원자력과 친밀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일일명예교사참여, 교재제공 및 교육활동실시, 전국과학교사 원자력강습회, 교원연수 및 교원시찰, 청소년원자력교실, 현장학습, 청소년원자력캠프, 장학금지급, 원자력작문모집 및 원자력공모전, 원전주변 학생사생대회 등이 있고 홍보책자를 과학교사에게 배포, 교재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그 외 홍보만화, 원자력이야기 등의 흥미 있는 홍보책자를 배포하고 있다.

또한 원전 홍보관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전시물과 시설견학을 통하여 원전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그 외 차세대교육 사업으로 정부(산업자원부/교육인적자원부)와 원자력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차세대교육협의회」운동을 통해 교과서의 원자력내용을 분석하고 바르게 서술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료제공 및 교과서의 내용수정을 해오고 있으며 관계 인사들의 원전시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원전이 21세기에도 주력에너지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차세대의 원전이해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해 학교에서부터 원자력교육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일반국민 홍보

원전에 대한 국민인식도는 원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안전성은 우려하고 있는 편이다. 원전에 대한 국민합의가 근원적으로 어려운 점도 이 안전문제 때문이다. 따라서 한수원(주)은 원전안전의 실상을 일반국민에게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서 원전운영의 투명한 공개를 통하여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홍보방법은 주로 언론홍보와 인쇄물을 통하여 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문화재단에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원전에 대한 국민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2002년의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한수원(주)을 널리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원전 이슈사항 발생시마다 언론 공개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는데 노력했다. 원전관련보도를 보면 발전노조 파업 동참여부, 영광 5호기 건축허가문제, 북한원전문제, 세계원전 사업자협회(WANO) 총회 개최, 한수원 루마니아 원전사업진출, 온배수양식어류 방류, 원전주변 환경영향조사 결과 발표, 영광 4호기 이용률 세계 1위, 한수원(주) 신용등급 우수, 울진 6호기 원자로 설치, 영광 6호기 상업운전시작, 방폐물 유리화 기술 상용화 등이 있었다. 언론홍보는 보도자료 배포, 언론사의 취재지원, 현장 취재시 동행설명, 기고 및 독자투고 등을 통하여 중앙언론은 물론 지역 언론에까지 보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 주간지, 월간지, 전문지에 특집 및 전문가 기고를 통하여 특수계층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2002년도는 다행히 원전에 큰 사고·고장이 없었기에 언론에서 왜곡 보도되는 사례는 없었다. 다만 2002년 7월에 월성 2호기 중수누설사건이 있었으나 해명자료를 배포, 진상을 밝힘으로써 단발로 끝나고 과장보도로 확대되는 일은 없었다. 몇 년 전 국정감사 기간에 큰 사고로 오해 왜곡·과장 보도된 월성중수사건이나 유사한 사건임을 감안할 때 이제 우리 언론도 건수위주의 남발성 보도경향에서 많이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쇄물을 통한 홍보는 원전에 대한 종합홍보지인 「원자력에너지」를 발간하여 일반인, 특히 홍보관 방문객과 학교에 배부하였고 특히 차세대 홍보책자인 「1318세대를 위한 원자력이야기」를 흥미 유발 내용과 교사교재로 활용하도록 참신성을 높여 발간함으로써 독자들의 높은 인기를 끌었다.

(4) 지역주민 홍보

원전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원전과 원전가동으로 인해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대부분 갖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는 일반국민과는 다르게 접근하는 홍보방식이 필요하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은 주로 여론주도층과 대중매체를 활용하지만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활동은 속성상 지역주민과의 밀착홍보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2년도 지역주민에 대한 주요 홍보활동을 원전지역별로 보면, 먼저 고리원전의 경우 신고리 원전입지 지역주민에 대한 집중홍보를 하였는데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지역주민 국내외 원전견학, 홍보자료 배포 등을 하였고 그 외에 어버이날 행사지원, 구기마을 구기교 개통행사 지원, 마을대항 체육대회 지원, 기장문화원 발간책자 인쇄비 지원, 부녀회 김장재료비 지원, 무료급식소 온풍기 지원, 소년소녀 가장 돕기, 생활축구연합회 행사지원, 주민초청 견학, 초중고생 사생대회 및 백일장 대회 개최, 내고장탐사 캠프, 피



〈그림 7-2〉 해변가요제 (월성)

서책 특별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에 힘썼다.

월성원전 경우 지역문화행사 및 체육행사와 경로행사 등 지역의 각종행사지원, 불우이웃돕기활동, 초중고생 사생대회 등 차세대홍보활동을 하였다. 영광원전 경우 각종 지역문화행사 지원, 어린이날 행사, 사생대회, 하계특별홍보활동, 홍보물학교지원, 스승의 날 일일교사 참여 등을 하였다. 울진원전 경우 울진군 주재기자간담회 등 신울진부지 특별홍보활동, 피서철 주변지역 해수욕장 야외 홍보활동, 지역주민 및 지역단체와의 간담회, 각종 지역문화행사 지원, 자매마을 지원, 지역주민 견학, 학교장학금 지급, 교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 주변지역학교 행사 및 특별활동지원 등을 하였다.

상기와 같이 각 원전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들과 친밀감을 도모하면서 공존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각 원전에서 격월제로 소식지발간, 지역문화제와 지역행사지원, 전시관과 관련시설을 무료결혼식장 또는 행사장이나 자연학습장, 회의장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영광과 월성원전에서는 온배수 양식장을 운영하는데 매년 5월말에 양식어류 방류사업을 통하여 온배수의 청정성과 유용성을 알리고 있고 특히 여름 피서철에는 영광, 고리, 월성, 울진 해변가요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기도 했다. 이와 같이 원전은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공감대형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지역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지역공존의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5) 앞으로의 원자력홍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자립문제는 국가정책상 최우선이다. 현재 국내 에너지 환경은 에너지수요 급증,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 대체에너지 개발한계, 이산화탄소 배출 급증, 에너지안보 위협요인 등으로 어려운 환경이다. 더구나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력은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장기전력수급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현재 원자력발전은 총 발전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석유의존도를 크게 낮추어 주고 있고 주력발전원으로서 안정적 전력공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전은 국가경제발전에 그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안전성은 우려하는 편이고 자기지역에 원전이나 관련시설유치는 적극 반대하고 있다.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배경은 원전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쉽게 접하는 언론이나 환경단체 등을 통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먼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에 대한 국민합의는 우선 원전지역부터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반원전정서가 강하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국내 환경에서 국민홍보는 계속해야하고 언젠가는 국민합의에 도달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홍보방향을 재설정하고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다.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짚어보면 첫째로 원전사업은 국가사업인바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한 예로써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도 국가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절대 우선해야 한다. 정부나 시도층에서 문제해결에 먼저 앞장서야지 정치적으로 지역정서를 이용하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면 해결되지 않는다. 지역도 국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가사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국민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은 국가사업인 원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원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 한다. 사소한 사건을 큰 사고로 왜곡·과장보도 하여 원전안전에 악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제 언론도 확실한 국가관을 가지고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원자력사업을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리고 협조해야 한다.

세 번째로 원전에 대한 국민합의가 잘 안되는 원인은 안전문제다. 따라서 원전홍보에서의 주안점을 원전안전의 증명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전 현장을 많은 국민들에게 보여주도록 해야 한다. 현장을 직접 보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원전의 실상 확인을 통하여 국민들은 안심하게 되고 원전신뢰는 제고될 것이다.

네 번째로 원전지역이 먼저 원전을 이해하고 지역합의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현실은 오히려 원전지역이 반대가 심하고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원전은 지역과의 공감대형성에 주력하고 형식적인 지역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내 현실에서 다른 에너지해결책은 없다. 앞으로도 원전은 대체에너지의 실용화까지는 에너지자립과 환경문제를 해결해주는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전에 대한 국민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국민홍보를 강화하되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대국민 이해증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전문적인 홍보역량을 축적하고 다양한 홍보영역을 개척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국민 지지기반 확충에 주력하였다. 특히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위한 부지확보가 지속적인 현안으로 자리하고 있는 실정에서 당면 입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홍보 지원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또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자기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

고 원전사업자와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함과 아울러 원자력이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알리는 홍보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 각계각층의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언론인, 정치인, 학자, 사회단체 등에 대해서는 원자력시설 시찰을 주선하여 안전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공개토론회, 심포지움을 통해서도 원자력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대국민 이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국민들의 여론을 파악하고 있으며, 원자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외 원자력계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각종 협력사업을 시행하였다.

(1) 국민이해사업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TV, 라디오, 신문, 단행본, 월간지 등 방송·인쇄매체를 활용한 이미지 개선 홍보를 TV-CF의 경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가 행복을 만들어낸다는 컨셉을 도입한 ‘행복에너지-원자력’ 편을 주요 시간대에 편성 방영하였다. 신문에는 이미지광고와 칼럼을 게재하는 동시에 전문지와 지방일간지를 통해 원자력의 일반현황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필요성 등 총 32회에 걸쳐 심층기획 기사를 게재하였다.

국내외 원자력시설 현장 방문기회를 마련하는 시찰사업은 120여회를 실시하였는데 언론인을 비롯한 주요 여론주도층과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원자력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성을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정보통신을 활용한 홍보는 보다 빠르고 깊이 있게 원자력을 알

고 싶어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동영상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격월간으로 인터넷 경품퀴즈잔치를 시행하였다. 또한 생활문화 전반과 원자력 관련 내용으로 구성된 웹진을 13만여명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매월 제공하였다.

(2) 차세대교육사업

미래의 주역인 차세대가 과학적인 사고를 지닌 건강한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자력문화의 이해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국가적 역량확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차세대에 대한 원자력교육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선 현장에서 차세대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올바른 지식과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교원연수원에 원자력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원자력시설 시찰을 실시하는 한편, 현직교사



〈그림 7-3〉 초·중·고교생 사생대회

들의 교과연구단체인 원자력교육연구회와 공동으로 서울과 전남 지역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원자력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형성, 특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더불어 장학사업, 육영사업에 집중되었다. 스승의 날을 전후하여 원자력계 홍보전문가들이 일선학교를 방문하여 시행하는 일일교사 원자력교육, 원자력발전소 현장견학과 더불어 전국 중고교생 원자력작문모집, 논문 및 포스터공모 등을 시행하여 학생들 스스로 탐구하며 원자력을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여름방학 기간중에는 원자력캠프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심신수련을 도모하였으며, 원자력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장학습과 함께 매학기 장학생을 선발하여 원자력계의 차세대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한편 제7차 교육과정개편에서의 초·중·고교 교과서를 분석하여 최신의 통계치와 용어상의 오류를 제시하였으며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ICT 학습자료, 교사용 지침서 등 각종 원자력교육용 자료를 제작 보급하여 학교교육에서 원자력이 보다 정확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3) 전시홍보사업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원자력의 전반적인 사항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시홍보사업은 상설전시관과 이동전시관을 각각 운영하였다.

1993년에 개관한 이래 연인원 540만여명이 찾아 중부권의 명소로 자리매김한 대전 엑스포공원 전기에너지관은 유희공간이던 별관을 개보수하여 전시기능을 보완하였으며, 국립서울과학관과 고창 삼인종합학습원에 운영하던 원자력관은 노후된 전시물을 교체하여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자력발전소 계통모형 등 대형 패넬 17종으로 신규 제작된 이

동전시물은 2002국제환경기술전, 2002서울국제전기종합기기전을 비롯한 대중적인 이벤트 행사에 활용되어 직접 찾아가는 기동성 있는 현장홍보를 선보임으로써 관람객의 흥미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축소 제작된 휴대용 모형물은 원자력 일일교사 사업 등 원자력강의시에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활용되었다.

한편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국립과학관과 서울과학관을 찾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봄맞이 원자력교실을 운영하였는데, 각 과학관에서 개최하는 과학탐구교실과 연계하여 원자력퀴즈 동서남북, 홍보영화 상영 등 과학꿈나무들이 원자력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4) 국제협력사업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인류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제간의 긴밀한 협조와 이해를 필요로 한다. 외국 관련기관과의 정보교환 또는 언론인, 학생 등의 상호 방문은 이러한 이해와 협조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원자력선전국의 원전 운영사례를 정책결정층과 시설입지 관련인사들에게 직접 체험케 하기 위한 시찰사업과, 국제적인 연구정책 정보수집 및 최신 홍보사례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 4회 한·불원자력홍보세미나에서는 프랑스 원자력청과 함께 양국의 홍보전문가들이 모여 원자력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방안을 모색하였고, 한일원산연차대회, 지속개발정상회의(WSSD), PBNC 등에 참가하였다. 1992년 협력각서를 교환한 일본원자력문화진흥재단과는 양국의 원전시찰단과 방문단의 교류를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였으며, 일본 요미우리신문 논설위원, 일본 전기공업협회 PA분과위원 등을 맞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현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5) 홍보연구사업

원자력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과 태도상의 원리를 규명하기 위한 사회심리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여기에서는 원자력 위험인식이 어떤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방송비평회와 공동으로 원자력의 미래와 방송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으며 홍보모니터제도를 도입하여 원자력계 전문가, 일반인, 지역주민 등 500명에게 원자력의 홍보사업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원전시찰사업과 방송 및 출판광고에 대한 사업효과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홍보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원자력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는 원자력홍보 연수강좌를 개최하였으며, 제6회 원자력홍보세미나에서는 2002년의 원자력홍보 성과를 모으고 원자력계의 우수 홍보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유공자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상 시상과 사례발표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6) 지역홍보사업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원전 시설의 입지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확보가 원자력계의 지속적인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의 지지기반을 토대로 각종 홍보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시설입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홍보에 주력하였다.

성공적인 입지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사업 절차와 더불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이해증진이 중요함에 착안하여 각종 간행물 배포와 지역언론을 통한 '원자력 바로알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시설입지 관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원자력시설 시찰을 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였다.

제3절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식

2002년 12월 영광, 울진, 고리, 월성 등 4개 원전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남녀 403명을 할당 추출하여 가구방문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사 결과 원자력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면서도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한편 정보공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가운데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주민들은 원전건설 및 운전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점으로 안전성(80.7%)을 들었으며 이어 환경공해(56.1%), 경제성(26.5%) 등을 들었다(중복응답). 이러한 인식은 원자력의 경제성과 청정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으나, 방사능 오염, 폭발 사고, 원전주변 거주시 질병 발생 가능성,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과도 일치했다. 또한 원전주민의 60.8%가 화학공장이나 석유, 가스시설보다 원전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그 이유는 운전중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주변지역에 원전이 있다는 것에 대해 주민의 61.3%가 불안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불안감은 여자, 연령이 높을수록, 농·임·어업종사자나 가정주부, 저학력층,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불안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운전중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새어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53%).

원전의 안전에 대해 원전주민들이 구체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점은 '방사선 및 방사성폐기물의 인체에 대한 피해(63.8%)'인 것으로 드러나 건강에 대한 위험인식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이와 달리 '원전의 안전설계 미흡(5.0%)'이나 '원전인력의 전문성 부

죽(2.7%)'이라는 응답은 미비한 수준이었다.

정보공개법에 대한 인지도는 원전주민중 25.6%에 지나지 않았으며 원전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는 응답역시 30.8%에 그쳤다. 원전정보 공개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점(중복응답)으로 '내용의 정확성' (74.7%)을 들었다.

원전 안전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중복응답)는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58.8%)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고/고장 내용' (46.7%), '발전소의 현재 상태' (41.9%) 등의 순이어서 주민들이 방사능의 누출과 그로 인한 인체상의 피해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전 주변지역의 환경방사능을 외부에 용역을 주어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은 32.8%에 불과하였다. 인지하는 주민들중 조사결과 및 설명을 신뢰하는 비율은 절반 정도인 55.3%였고 더욱이 조사결과 및 설명이 주변환경의 방사능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비율은 이보다 낮아 45.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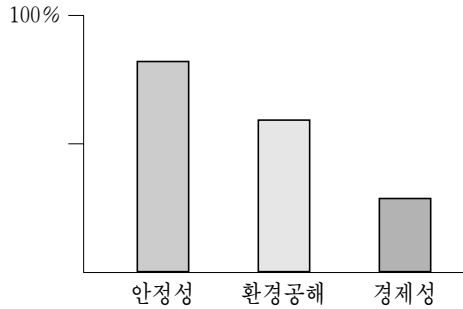
원전주민들이 원자력발전소 안전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경우 가장 먼저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원자력발전소 폐기물 처리과정' (34.0%)과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방사능 감시과정' (3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에서의 사고·고장정보 공개지침에 대해 알고 있는 원전주민은 응답자의 21.6%에 불과하였다. 정부가 원전사고·고장정보 공개지침에 의해 사고나 고장정보의 등급을 발표하면 그 결과를 신뢰할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41.9%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공개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주민들의 55.6%가 과거 경험으로 보아 사고나 고장정보를 은폐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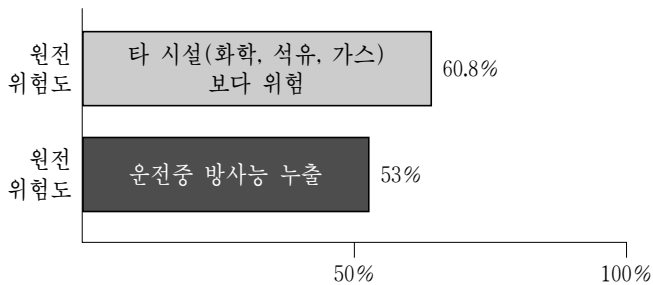
원전에서 고장이나 사고 발생시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가장 바

● 원전건설 · 운전시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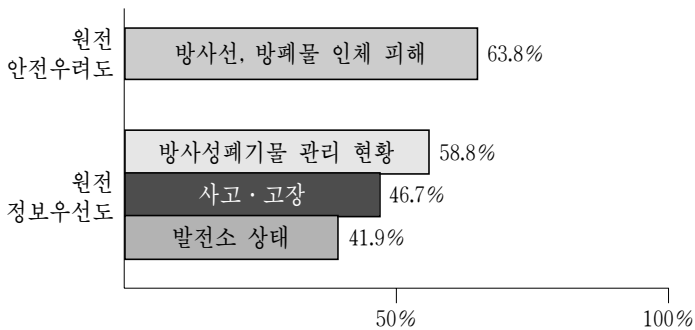
- 안 전 성 : 80.7%
- 환 경 공 해 : 56.1%
- 경 제 성 : 26.5%



● 원전 위험도와 불안도



● 원전 안전우려도와 정보우선도



〈그림 7-4〉 원전 지역주민들의 원전인식도

람직한 방법에 대해 원전주민의 61.5%가 TV를 들었으며 ‘동사무소방송’이나 ‘주민설명회’라는 의견은 각각 17.9%와 11.2%로 TV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조사기관측은 첫째, 방사능과 방사성폐기물의 인체피해를 가장 우려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홍보메시지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둘째, 원전 정보공개 정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개되는 정보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원전관련 정보공개정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셋째, 환경방사능 조사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공개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넷째, 과거 경험으로 보아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의 요구에 수세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 다섯째, 원자력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는 주로 인쇄매체이므로 공익광고와 같은 정기적인 홍보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제4절. 해외의 여론동향

1. 미 국

미국은 테러사건 이후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의 원자력에 대한 지지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전의 안보 및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조사 대상자 중 62~75%가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언가 잘못되는 경우 원자로는 자동적으로 정

지된다는 것”, “다중 방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미사일 또는 비행기가 연료봉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층의 강철·콘크리트 장벽을 뚫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원자력에너지협회(NEI)의 의뢰로 2002년 2월에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에서는 또 미국의 원자력보안대를 연방으로 통합하는 문제와 관련해, 응답자의 56%는 원자력보안대를 연방정부 차원의 보안대로 대체해서는 안된다는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와 같은 입장을 취한 반면에 37%는 이같은 조치에 찬성했다.

응답자의 60%가 원전을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 수치는 1980~1990년대보다 높은 것이었으나 전년 10월에 실시된 조사 결과보다는 낮은 것이었다. 응답자 중 66%는 “원자력이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원자력의 계속 이용을 지지했고, 75%는 “원자력이 장래의 에너지 공급을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에너지 자립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가 행정부와 의회가 신뢰성 있는 에너지 공급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했으며, 71%는 외국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그만큼 대기 오염도 줄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2. 스웨덴

스웨덴 원자력훈련안전센터(KSU) 분석그룹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인 TEMO사가 2002년 5월에 전화인터뷰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국민의 약 80%가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계속 이용과 추가 개발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또 다시 나타났다.

응답자 중 78%는 원자력의 계속 이용을 지지했고 19%는 정부 결정에 따라 기존 원전을 조기 폐쇄하는 데 찬성했으며 나머지 3%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 78%의 찬성자 중 35%는 규제당국이 제시한 안전기준을 충족시킨다면 기존 11기 원전의 계속 가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8%는 비용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최종 폐쇄한 후 총 11기의 가동중인 원전 기수를 유지하면서 기존 원전을 대체하는 데 찬성했다. 나머지 15%는 원자력 선택방안과 필요하다면 추가 원전건설에도 찬성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스웨덴 남부지역에서 원자력발전을 상당히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들 응답자중 31%는 가동중인 원전의 계속 이용을 찬성했고, 다른 31%는 가동수명이 다되면 기존 원전을 대체하기를 원하였으며, 25%는 원자력 개발과 신규 원전건설에 찬성했다. 14%만이 원전 조기 폐쇄의 정부정책을 지지했다. 작년 11월에 이어 이번에 실시된 조사에서 스웨덴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견해는 최근 수년간 거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여론조사기관인 시포 리서치 앤드 컨설팅사가 8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8~35세인 젊은 층의 51%가 국가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의 계속적인 이용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의 계속적인 이용을 지지했던 응답자의 51%중 66%가 남성, 36%가 여성이었다. 원자력발전의 계속적인 이용에 찬성하지 않은 응답자의 34%에는 남성이 26%, 여성이 43%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머지 14%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

조사대상자의 정치적 성향을 보면 중도우파 정당 지지자는 64%가 원자력을 지지한 반면, 전통적으로 반핵적인 중도좌파 정당 지지자는 48%가 원자력을 찬성했다.

응답자들이 지난 4년간 원자력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바뀌었다고 느끼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5%가 긍정적, 11%가 약간 더

긍정적, 10%가 약간 더 부정적, 4%가 매우 부정적, 70%가 그들의 견해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당 지지자중 15%는 원자력발전에 대해 약간 더 긍정적으로 느낀 반면, 9%는 약간 더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원자력을 지지하고 있는 사회민주당 또는 좌파 정당 지지자중 12%가 원자력에 대해 약간 더 긍정적으로, 13%가 더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여론조사는 스웨덴에서도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남부지역에서 원자력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곳에서는 53%가 원자력을 찬성, 33%가 반대, 14%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지난 5월 발표된 여론조사결과에서는 스웨덴 인구의 약 80%가 원자력발전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3. 핀란드

핀란드 정부는 이 나라에서 5번째의 원전 건설을 두고 우호적인 여론이 이를 뒷받침하였다. 정부는 2002년 1월 의회에 대한 신규 원전 건설을 신청하기로 승인했는데 앞 주에 주요 일간지인 '헬싱 인 사노마트' 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핀란드의 5번째 원전 건설을 승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33%는 반대, 28%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 의회의 건설 승인 결정이 내려진 2002년 5월 직후 핀란드 무역연합중앙기구(SAK)의 의뢰로 수오멘 갤럽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핀란드 국민 대다수가 5번째 원전건설을 위한 의회 결정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55%가 이 의회결정에 찬성했고 31%는 반대, 13%는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여성의 대다수(44%)가 이 의회 결정에 찬성했고 40%가 반대했다. 산업계 관계자들은 전통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원자력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정책 관련 정보의 신뢰도에 대한 질문에서 조사대상자 중 대다수(69%)가 "핀란드기술연구위원회(VTT)가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응답했다. 이 분야에 대한 다른 기관들의 신뢰도는 SAK(42%), 5번째 원전 건설 신청서를 제출한 전력회사인 TVO사(41%), 핀란드에너지산업재단(Finergy, 40%)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대부분(75%)은 에너지 소비가 장래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고 모든 에너지 선택의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대다수(78%)는 러시아로부터의 전력수입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큰 문제라고 보고 있었다.

전력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격(25%), 환경문제(22%), 공급안정(21%), 전력생산의 자급자족(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불가리아

불가리아 원자력회의(Bulatom) 요청에 따라 갤럽 인터내셔널사가 2002년 4월 18세 이상의 성인 1,022명을 대상으로 면접형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불가리아 국민 대다수는 자국의 유럽연합 가입이 지연되는 일이 있더라도 정부는 코즐로두이 원전에 대한 조기폐쇄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7% 이상이 코즐로두이 원전중 일부를 소정기간 내에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응답자의 66.3%가 자국의 가입이 지연되는 일이 있더라도 금년 말까지 실시하도록 돼 있는 이 원전 1, 2호기의 폐쇄를 연기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조기폐쇄 연기 반대가 7.5%, 무응답이 25.2%였다.

응답자의 69.5%가 유럽연합의 원전폐쇄 요구에는 안전성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 중의 42%는 경제적

인 이유를 들었고 32%는 불가리아를 유럽연합에 가입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유럽연합이 다른 나라들의 전력시장 개방을 위해 코즐로두이 원전 폐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고, 90%는 원전을 폐쇄하면 국내 전력요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완성된 벨레네 원전에 대해서는 59.8%가 완성에 찬성했고 9.3%만이 반대, 30.9%는 무응답이었다. 그러나 코즐로두이 원전 일부를 동시에 폐쇄하고 벨레네 원전 건설 공사를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41.8%가 ‘모르겠다’, 30.1%가 찬성, 28.1%가 반대했다.

5. 유럽연합

국제원자력규제자협회(INRA)는 15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002년 초 발표했다. 2001년 10~11월 사이에 각 회원국에서 약 1,000명씩 총 1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유럽연합 국민들의 신념, 지식, 희망 등을 조사했는데 이는 1998년에 실시된 여론조사의 뒤를 이어 실시된 것이다. 주제는 기본지식에 관한 질문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 처분계획, 광범위한 원자력문제 등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원전이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모든 유럽인들 중 91%가 그런 것으로 믿고 있었고 2%만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6%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방사성폐기물이 매우 위험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1998~2001년 사이에 79%에서 75%로 다소 감소했다.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대

답한 사람은 10%에서 14%로 증가했다.

응답자들이 방사성폐기물 문제에 관해 전혀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 여부를 물은 질문에서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여 덴마크(10%), 스웨덴(12%), 핀란드(16%), 벨기에(48%), 포르투갈(47%), 스페인(43%)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는 1998년의 것과 별 차이가 없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가장 위험한 종류의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는 각 유럽국가들이 자국의 처분장 개발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찬성했는데 이는 1998년의 75%보다 하락한 것이다. 왜 아직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한 국가가 없는지에 대한 3가지 질문에서 유럽연합 전역의 응답자들 중 14%는 “의견이 없다”, 20%는 ‘정치적인 무관심’ 탓으로 돌렸고 46%는 “안전한 처분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2001년 사이에 실시된 이 조사에서 “방사성폐기물이 자국에서 관리되고 있는 방식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유럽연합내 평균수치가 41%에서 29%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8.5%는 유럽연합 가입신청 국가에서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냈다.

평균적으로 응답자의 1/3만이 원전이 다른 에너지원보다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51%는 “모든 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된다면 원자력발전이 유럽연합에서 전력생산의 선택방안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특히 이들 중 15%는 이를 강력히 지지했다.

유럽인 5명 중 1명은 원자력산업이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개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언론매체가 방사성폐기물 문제를 보도하는 데 있어 공정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0대 50의 거의 같은 비율로 의견이 나뉘었다.